

초국적 이주자로서 노령기 재한 중국 동포의 삶

한소정* · 김동순**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미귀화 재한 노령 중국 동포들의 삶을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중국동포 집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중국동포 8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적 생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들은 이주 초기 및 정착 과정에서 가족, 친족, 친구 등으로 구성된 동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둘째, 일상생활은 한국 내 중국동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셋째, 노령기에 접어든 이들은 한국과 중국 양국을 모두 고려한 다중적 노후 전략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넷째, 그들의 삶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사회의 경계를 넘나들며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의 연속이었다. 이는 경계횡단적 삶을 영위하며 다중 정체성을 형성해온 중국 동포들의 초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초국가적 삶의 조건을 반영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확대, 노령 이주민을 위한 여가문화 지원, 관련 통계 구축 및 정책연구의 체계화 등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요어 초국적 이주자, 재한 중국 동포, 노령기, 노후 대책, 질적연구방법

이 연구는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에서 수행한 「안산시 거주 노령 중국동포의 생활 실태」(AEF-P20-2412-01) 연구의 질적 연구 부분 자료를 초국가주의 관점으로 재분석하였음.

* 제1저자, 한국이야기아카이브, 사회복지학, 연구원, evedaisy@naver.com

** 공동저자,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사회복지학, 연구원, daressa@skku.edu

1. 서론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며,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중국 국적 동포는 668,126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2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재한 중국 동포의 국내 이주는 1990년대 초부터 급증하였으며, 장기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4년 현재 재외동포(F-4) 비자 체류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40.1%에 이른다(한국경제 2025.04.03).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의 약 70.4%(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가 중국 동포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한 중국 동포 집단에서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혈통에 기반한 귀환 이주(ethnic return migration)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시장 수요에 따른 경제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정부는 동포라는 혈통적 조건을 입국 및 체류의 자격요건으로 설정했지만, 이들을 주로 저임금 단순노동력의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최서리 외 2016: 108). 이에 따라 중국 동포는 비록 '동포'라는 이름을 지녔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일반 외국인력과 유사한 처우를 받았다. 예컨대 중국 동포 대상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3,000만원 이하인 비율이 90.5%에 달해 경제적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오정은 외 2016: 51).

최근 영주 및 귀화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소득 기준이 해마다 상향되면서, 상당수 노령 중국 동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자격으로만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고령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나, 체류 자격상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들의 노후 생활과 삶의 질,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의 고령화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고령 이주

민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 통합 및 사회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 특히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고령 중국 동포에 대한 논의는 복지 정책의제에 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재한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양한순 외 2013; 오정은 외 2016), 노동시장 구조(김유휘 2018; 이형노 2019), 정체성과 소속감(김운태 2017; 이춘호 2014; 황해영·천지아 2016), 체류 자격 및 이민정책(이도은·최서리 2020; 이창원 외 2021; 최서리 외 2016) 등 제한된 주제에 집중되어왔다. 최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박경숙 외 2019; 박미화 외 2024), 고령 중국 동포의 삶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관점을 바탕으로 재한 중국 동포의 노령기 삶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중국과의 사회적·경제적 연결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 생계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적 탐색을 통해 향후 고령 이주민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존 연구 검토

1) 중국 동포의 이주와 고령화

중국 동포의 본격적인 한국 이주는 1980년대 후반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정치·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02년 외국국적 동포 취업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중국 동포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노동 분야인 건설업, 청소업, 간병,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외국 인력 수급 정책이 ‘혈통’이라는 문화적 기제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유입을 정당

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음을 보여준다. 이어 2007년에는 방문취업(H-2) 제도가 신설되어, 한국 내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에게도 입국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서 2년 이상 근속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비자를 확대 발급하고, 2촌 이내의 가족 초청까지 허용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체류 기반이 마련되었다(양한순 외 2013: 3; 최서리 외 2016: 6-15).

이러한 제도적 완화와 유연화는 단기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중국 동포의 장기 체류를 가능케 하였고, 그 결과 국내 체류 중국 동포의 인구학적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에는 생산가능연령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의 고령화가 점차 가시화되었다. 실제로 2010년 재한 중국 동포 중 생산연령(15~59세)의 비율은 약 90%였으나, 2017년에는 76.2%로 감소하였고,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9.3%에서 21.8%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 동포만을 특정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2024년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기준으로 보면 생산가능연령층은 57.4%,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40.1%에 달한다. 전체 외국국적 동포 중 약 70.4%가 중국 동포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동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체계의 사각지대 문제와도 연결된다. 통계청(2022)은 이주 배경을 가진 고령인구의 비율이 2020년 1.1%에서 2040년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인 수요도 2017년 대비 2021년에 52.9% 증가하였다(서종근 외 2023: 277). 아울러 2024년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외국인은 10,410명이며, 그 중 53.5%가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서울신문 2024.10.22). 이는 고령 중국 동포가 복지 수요의 주체로 점차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외국 국적의 고령 동포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입 여부를 전제로 하며, 일정 소득을 신고한 체류자만이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약을 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용직·비정규직 중심의 노동 경력을 가진 고령 동포에게는 구조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실제로 고령 동포의 다수는 과거 비공식 노동시장에 종사해 온 이력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입 실적이 부족하거나, 과거 경력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및 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김안나 외 2012). 또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결혼이민지를 주요 수급자로 상정하고 있어, 고령 외국 국적 동포는 제도의 외곽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배제 구조 속에서 중국 동포 고령층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 요양시설 접근성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박미화 외 2024: 23-51). 특히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고령 동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주요한 생계 기반이었던 단순노동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일용직 중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중국 동포의 이주 배경과 현재의 고령화는 단순한 연령 문제나 복지 수요의 문제를 넘어, 이민 정책, 노동시장 구조, 사회보장 체계의 연동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구조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삶은 복지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외국인의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적 재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2) 재한 중국 동포의 초국가주의적 특성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는 이주민들이 이주국과 출신국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망을 동시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Schiller et al, 1992: 18-19; 1995). 이들은 단지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영구 이주(permanent migration)'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사회에 걸쳐 정체성과 소속감을 구성하고 실천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동일 국가 내 정착과 동화 중심의 이주 이론을 넘어, 국경을 가로지르는 '삶의 양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제한 중국 동포의 이주 양상은 이러한 초국가주의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중국 동포의 이주는 초기부터 가족이나 친척을 매개로 한 연쇄이주(chain migration)의 성격을 띠었으며(Wong 2008), 이들은 한국 내에서 중국과의 사적 네트워크—가족, 친척, 동향인, 친구 등—를 재구성함으로써 양국에 걸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해 왔다. 이주자는 자국에서 가져온 사회문화적 특성과 이주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는 국경을 넘는 사회공간 속에서 중첩된다(Schiller et al, 1995).

특히 중국 동포는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에 속하면서도, 국가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해 ‘중화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국가 정체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는 중국 동포에게 민족적·문화적 동질성과 국가적 소속감 사이의 긴장을 유발해왔다(김운태 2017; 2021; 최승현 2020). 이로 인해 제한 중국 동포는 민족적 동질성과 중국 내 소수민족 정체성,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이방인으로서의 위치 사이에서 다층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특정한 정체성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전략적인 소속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김운태 2022).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중국 동포 다수는 중국으로의 귀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양국의 제도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초국가적 전략(transnational strategy)을 구사한다. 초국가적 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s)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며, 법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복수의 국가에 걸쳐 유지하는 것이다(김운태 2021).

이러한 전략은 조선족이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도 개혁개방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라는 평가와도 관련된다. 조선족 사회는 중국 내 도시로의 이주뿐만 아니라, 한국·일본·미국 등 해외로도 활발히 진출하며, 유연하고 분절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로 진화하였다(최승현 2016). 제한 중국 동포는 이러한 조선족의 국제적 유동성과 경제적 적응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내에서의 정주와 중국과의 연결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실천을 다층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민족주의 담론 속에서 일관된 소속과 충성을 요구하며 ‘기회주의적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재한 중국 동포는 종종 ‘범죄 연루자’, ‘노동 시장 위협’, ‘이중 소속’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재현되며, 다문화 담론 내부에서도 배제되는 타자화의 대상이 된다(김지혜 2018; 최서리 외 2016). 특히 반중 정서와 민족 동질성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중국 동포는 ‘우리’도 ‘그들’도 아닌 불안정한 경계인의 위치에 놓이며, 이를 통해 ‘배제된 정주자(excluded settler)’라는 역설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중국 동포의 초국가주의는 생존과 전략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 그리고 사회적 권리에 대한 재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은 기억 속의 모국인 ‘조선’, 실존하는 생활 터전으로서의 ‘한국’, 그리고 제도적 기반이 되는 ‘중국’이라는 세 공간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하며 살아간다(김지혜 2018). 이러한 정체성의 다층성은 오늘날 세계 이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구본규 2013; Levitt 2004), 이는 초국가주의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글로벌 이주 구조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령기¹에 해당하는 재한 미귀화 중국동포의 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방법은 자료에서 패턴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관심사와 선택에 따라 인식론이나 존재론적 전제에 구속되지 않고 폭넓은 연구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김인숙 2016; Merriam 2009).

연구참여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중국동포 중 대한민국

1 본 연구에서는 노령기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초과한 연령대인 60세 이상으로 정의하였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미귀화자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참여자 모집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기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초기 참여자를 통해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참여자군을 확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총 8명이었으며, 그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4년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면접은 약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고,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활용하여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사전에 질문지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응답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접은 모두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되었다. 녹음된 면접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사항

연번	ID	나이	성별	출생지	입국 년도	거주 자격	주거 형태	직업	중국 연금	한국 내 가족
1	사례 A	63	여	흑룡강성	2000	F6	전세	요양보호사	○	-
2	사례 B	75	남	길림성	2006	F4	월세	건설일용직	○	배우자, 아들
3	사례 C	62	남	흑룡강성	2005	F5	자가	건설일용직	×	배우자, 딸(사위), 아들(며느리, 손자녀)
4	사례 D	71	남	길림성	2015	F4	월세	무직(前, 건 설일용직)	○	배우자
5	사례 E	65	남	흑룡강성	2011	F4	자가	건설일용직	×	어머니, 배우자, 아들(며느리, 손자녀)
6	사례 F	69	남	길림성	1993	F4	월세	제조업 근로자	○	딸
7	사례 G	73	남	요녕성	2011	F4	월세	무직(前, 제 조업근로자)	○	배우자
8	사례 H	75	여	길림성	2014	F4	전세	무직	×	배우자, 딸(3명) 아들가족(며느리, 손자녀)

자료 분석은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우선 연구자는 녹음 파일을 반복 청취하여 참여자 진술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을 여러 차례 정독하였다. 이후 의미 단위(mean unit) 분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패턴 분석(pattern analysis)을 실시하여 주요 범주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범주에 포함되는 진술 내용과 연구자의 해석을 종합하여 주제를 기술하였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²을 받은 후, 윤리적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행되었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 질문지는 귀화한 중국동포이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자 2인에게 사전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으며, 자료 해석 및 주제 도출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학 박사 1인의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4. 결과 분석

1) 관계망을 중심으로 경계를 넘는 삶

재한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는 대부분 경제적 생계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다. 사례 H를 제외한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으며, 이는 이들의 삶이 이주노동자적 성격을 지님을 보여준다. 이주 시기는 참여자별로 상이한데, A와 F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30대에, B, D, F, G는 중국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60세 전후에 이주하였다.

뭐 배운 것도 없이 그래서 부모들이 농사 지었던 말이야. 한국 나올 때까지 와이프가 나가가 돈 벌고 외지로, 정말 뭐 애들 키우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 2005년

2 승인번호: 1263-202409-HR-118-01 / 연구 참여자는 수집된 원 데이터를 기초로 한 향후 연구에도 동의한다." 내용을 동의서에 명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음.

도 나왔었거든요. 그 때 처음으로 나왔어. 그때 그 친척들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사례 C).

중국에서 회사생활 끝나고 그때는 60대다 보니까 중국에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뭐 한국에 한번 좀 나와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지(사례 G).

이들의 한국 이주는 돌발적이거나 단절된 이동이라기보다는,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와 한국 내 재한 중국 동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속적·연결적 이동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미 한국에 거주 중인 지인, 친척, 자녀 등과의 관계망을 통해 이주 결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초기 정착지는 서울의 구로, 영등포 등 조선족 밀집 지역이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일자리를 탐색하며 한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 (소개해 준 사람이) 학원 꾸려준다 뭐 해야 준다 이래서 서울에 왔는데... 이제 또 ○○시에 오게 되면 학생들이 많겠다고, 누가 또 그렇게 소개하니까 ○○시에 또 왔어요(사례 D).

친척분들은 지금 00에도 있고 사방 널려 있어요. 한국에 저기 뭐 서울 지역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죠(사례 E).

○○(지역 이름)에 중국 사람 많고 하니까 왔어요. 우리 동서, 넷째 동서, 다섯째 동서. 한국말로 동서 맞죠? 우리 마누라의 여동생들...(사례 B).

이러한 이주 네트워크 기반의 정착 과정은 일자리 탐색, 주거 확보, 지역 적응 등 전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동포 커뮤니티의 내적 순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직업 선택의 측면에서도 참여자들은 대체로 비정규·육체노동 중심의 일자리에 종사하였다. 중국에서 교사, 교수, 회사원 등 중산층 전문직으로 살아왔던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건설업, 제조업, 청소업 등 일용직을 주로 전전하였다. 초기에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탐색했지만, 언어, 자격,

시장의 구조적 장벽 등으로 인해 대부분 고용의 하층 영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어를 가르치는 데 없겠는가 찾아보니까 학원에 찾아 갔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 안 나왔어요... 친구가 날 데리고 가서 일하자고, (그런데) 가 보니까 일하는데 막 죽겠어요. 어릴 때 일해보지도 않았고 하니깐. 얼마나 힘든지 땀이 나고 힘들고 밥 먹을 때도 밥 안 내려간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처제 나를 데리고 용역에 갔어요(사례 B).

(음악학원 강사를 하러) 왔는데 그 당시 학생이 한 6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뭐 용접도 배우고 학원에 가서, (건설현장) 일이라는 건 여기 와서 배운 거예요(사례 D).

6년 정도 (부인과) 같이 다니면서 정원 청소도 한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호텔 청소도 하고, 그 후에 저는 이런 건설 현장이든가 하고, 그 후에 우리 집사람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일은 못하고 나는 공단 공장에 일용직으로 계약직으로 다녔죠(사례 G).

사례 H는 예외적으로 노후 동거 목적의 비경제적 이주 사례였다. 그는 남편과 자녀를 먼저 한국에 보낸 후 혼자 중국에 남아 생활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고 돌봄이 필요해지자 자녀가 거주하는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중국 정착을 선호하고 있어 부부가 양국에 걸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고령 이주자의 삶이 단순한 경제적 동기를 넘어, 돌봄, 가족 동반성, 정서적 안정 등 복합적 이유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A의 사례는 생계형 단기 이주가 장기 체류로 전환된 경우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중국의 이들을 대학까지 부양하기 위한 목적의 파견 노동이었으나, 남편의 사망과 한국인과의 결혼 및 이혼을 거치며 체류 자격의 변화가 생겼고, 이는 직업 안정성 확보로 이어졌다. 결혼이주 비자 소지자로서 요양보호사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종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는 노년기 생계 기반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경계 안의 경계: 한민족, 그러나 타자

참여자들은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이 집단 이주해간 동북3성에서 태어났지만 한반도와 별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사례 C, F, H는 조선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조선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중국 국적이지만 중국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는 중국 안에서 경제적 위치를 형성하며 조선과 연결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예순이 넘어 한국에 온 H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평생 중국에서 살았어도 중국어를 몰라서 '어마어마하게 살기가 힘들었는데 한국에 오니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글을 읽을 수도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다.

한국 사람이 많은 동네였어요. 우리 사는 데는 방송국 있잖아요. 그것도 이 한국 말로 나와요. 신문도 한국 걸로 나오는 신문이고 간판도 있잖아요. 한국 걸로 다 써요(사례 F).

조선학교 다녔어요. 중학교 못 다녔어요. 학교도 우리 거기 마을에 소학교 5학년밖에 없어요. 우리 마을이 작아요. 한 95(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 글도 제대로 모르지. 그저 내 이름이나 조금 쓰고(사례 C).

우리 학교에는 우리 그 고장은 중국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고장은 다 중국 사람 있는데 우리는 중국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면 조선 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말을 더 못 배웠지. 그래서 참 불편한 게 많았죠. 중국 말이 안 되고 글이 안 되죠.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가려면 간판을 알아야 되고 글을 알아야 되고 말을 알아야 되잖아. 어마어마 힘들었죠 내가. 근데 한국을 처음 오니까 뭐 같은 말이니까 병원에 일반 내 혼자 가도 되고 뭐 가면 뭐 아주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뭐 말을 첫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글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사례 H).

한국에서의 일상은 대부분 조선족 공동체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된다. 참여자들은 주로 친척, 자녀, 지인들과의 연결망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였다. 이 같은 관계망은 정체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반이자,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삶을 견디는 대안적 생존 구조로 작동한다.

중국 동포 간의 네트워크는 자녀 세대까지도 이어지며, 민족 내 관계망을 중심으로 생계를 구성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주류 한국 사회의 경제적 중심으로의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포 사회 내부에서의 자조적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현장에, 화장실 방수하고 타일 붙이니까 차 몰고 다니니까, (아들은) 잘 살아요, 그 용역에 차 몰아. 어쨌든 간에 그 차 10년 넘게 몰았으니까 (사례 C). 큰딸은 구로에 살고, 둘째 딸은 신대방에 살고 또 우리 아들은 구로구 디지털단지 거기서 살고, 요 막내딸 하나만 여기 살지. 큰 딸도 있고 아들도 거기도 다 동포들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안 아플 때 여기(딸 여행사) 와서 점심에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조금씩 해주고 이랬는데, 이것도(딸의 여행사) 옛날에는 좀 잘 됐어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많이 좀 떨어졌어(사례 H).

여가생활에서도 참여자들은 중국 동포 중심의 활동을 지속한다. 마작, 장기, 제기차기, 탁구, 음악 활동 등은 대부분 조선족 커뮤니티 내부에서 조직되고 운영되며, 비공식적 사회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례 B, C는 일거리가 없는 날은 주로 안산시외국인지원본부 옆 야외무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 곳에는 어림잡아 하루 150명 이상의 남성 중국 동포들이 모이는데 담배를 피며 마작이나 장기를 두거나 삼삼오오 모여 담화를 나눈다. 이 곳은 중국동포들에게 무료를 할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정보 교류의 장으로 보인다.

우리 교포들이 문화생활이 없으니까 놀러 갈 데 없고 좀 심심해서 이레가 (마작 마당에서) 하루 시간 보내면 집 가가 뭐 밥이나 먹고 tv나 잠오면 자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사례 C).

사례 E는 동포들이 길에서 그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며 ‘거지들이 밥 빌어 먹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서, 음악을 전공하고 음대교수를 하였던 본인의 경력을 살려서 노래 교실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중국 동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속상해하였다.

딱 이게 보게 되면 정말 거지들이 와서 저기 앉아 밥 빌어 먹는 그런 감이 나요. 늘 데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좀 데려다 조금 이제 무슨 노래라도 배워주고 (싶은데) 칸(공간)이 없어요(사례 E).

참여자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A는 제기차기 모임에 오래 참여하다가 탁구를 배웠고 지금은 섹스폰을 배우면서 악단 활동을 하고 있다. A가 하는 활동의 구성원들은 모두 중국동포들이다. 한국에 거주한지 24년째인데도 직장 생활 외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중국동포들이다.

그전에는 이제 제기차기 운동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원이 한 180명 됐거든. 거기서 한 6년 이제 이제 근무하면서 토요일만 이제 운동회 하고 막 이래 했는데 그건 좀 이제 무리하더라고 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탁구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스타 거기에서 선생 하나 모시고 탁구를 이제 한 그때부터 쳤죠. 지금도 시간만 되면 가는데 요즘에는 섹스폰 좀 배우느라고, 공연이 또 잡혀 있어요. 12일날이랑 어버이 날이랑 또 이제 공연이 잡혀 있어서 그 곡 연습하느라고...(사례 A).

중국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안산시 원곡동 주변 공원에 가면 여러 명이 둥글게 둘러서서 제기차기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원 광장에는 해질녘부터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남녀들이 백여명 모여서 트로트와 유사한 연변 음악에 맞춰 짝을 지어 춤을 춘다. 이주 후에도 중국에서 조선족 문화와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지 여가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삶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정체성과 자율성의 표현이기도 하고, 공동체 구성

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제된 삶의 결과로서 폐쇄적인 사회적 경향을 낳기도 한다.

중국에서 참여자들의 언어와 생활문화의 기반이 한국어·조선문화에 근거해 있었으므로 한국으로 이주했을 때 낯섦이 완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이 곧 완전한 사회적 수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 사회 내에서 조선족은 여전히 ‘외국인’ 또는 ‘타자’로 간주되는 경계적 존재였으며, 참여자들은 그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조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 사회로부터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태어나 자라던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으로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모국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례 D는 자신의 처지를 “중국에서도 2등 공민이고 한국에서도 2등 국민”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으로서, 한국에서는 이주민으로서 이중적 배제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말하기를) 누나는 중국에서 대우 못 받고 한국 가서 제대로 못 받고 무슨 그렇게 사는가 이려고 그때는 막 자존심 상하지. 한국 가서 제대로 대우받냐고, 한국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막 나를 중국에 있었으면 사회생활 잘하면 우대나 봤지 막 이러면 그렇게 말할 때는 자존심 상하지. 그렇구나 여기서 진짜 차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사례 A).

우리 중국 가도 사실은 말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라 안해요. 중국에서도 2등 공민이고 여기 와도 2등 공민이야. 3등 공민이고, (중국) 어떤 데 가게 되면 쓱쓱 찍어놓고 말해서 막 한족 아니면 가버려라 이렇게 말한다고(사례 D).

내가 어떤 때 생각하면, 할 일 없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린 정말 중국 사람이라(여김 받는 거라)(사례 B).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무슨 중국에 중국 호적 올리고 싶어서 올렸어요. 중국에서 소수 민족들이 하나 우대받는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평생 살아봐야 사람 대접 뭐 사람 속에 못 가잖아요(사례 E).

참여자들은 중국 국적이지만 ‘조선 사람’의 정체성을 가졌다. 말하자면, 조선 사람이지만 ‘한국사람’은 아니다. 이들은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중국 땅과 문화에 걸쳐진 삶을 살아왔기에 중국과 한국 두 세계 모두에 속해 있지만,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었다.

비록 배제된 위치에 놓여 있으나, 다수의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보다 익숙해졌고,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한국에서의 정착을 희망하고 있었다. 언어적 편의성, 자녀와의 근접성 등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요인이며, 이는 중국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한국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제 여기 생활에 적응돼갔고 거기 가면 중국어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근데 옛날에 중국어도 잘했죠. 내가 회사에서 통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면 발음이 이상해요.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엄마 이제 이상하게 말한다고, 옛날처럼 유창하게 안 느끼고 중국어가 이상하게 느낀대요. 말하는거 너무 안 하나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냥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좋아요(사례 A).

한국 생활을 접고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또 한국에서 한 10년 살다보니까 적응이 한국이 더 잘 되고 중국의 생활에 적응이 좀 안 되는 거죠(사례 G).

이제 여기에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난 습관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물 모든 게 환경이 다 내한테 맞는 거죠. 이제는(사례 D).

그러나 이러한 정착 의지는 한국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는 가까우나 제도적·사회적으로는 경계선 위에 놓인 존재로, ‘한민족이지만 한국인이 아닌’, 포섭되지 않은 동포의 위치를 살아가고 있다.

3) 두 세계 사이의 노후: 초국가적 전략과 경계 위의 삶

제한 중국동포 노인의 삶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중국을 완전히 떠나지 않

은’, 이중적 경계 위에 존재한다. 이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체류 경험 속에서도 여전히 정주하지 못한 존재로 남아 있으며, 특히 노령기에 접어들며 생계, 주거, 체류 자격,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안정성과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1) 노동의 단절

참여자들의 한국 체류 기간은 최소 9년에서 최대 31년에 이르며, 평균 약 17.1년이다. 비교적 젊은 시기에 이주한 A, C, F는 노동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유지했으나, 고령화됨에 따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파트타임, 일용직,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고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 안하고 어떤 때 친구나 누가 부르면 한 번 가끔씩 가고, 대중없어요. 어떤 때는 한 이틀 하고 어떤 때는 하루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76세니까(사례 B). 일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번 달 이번 달 저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배만 드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배가 다 끝나서 일이 없어요. 그럼 다른 데는 못가요. 어찌 나이가 있으니(사례 D).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지금 뭐 회사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더 힘들잖아요.(사례 G).

노동의 단절은 곧 소득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노후 생활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자녀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딸이 점주란 말이야. 여기 앞에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이런 거라요 뭐 한 사십, 오십만원씩 부모하라고 생활비 좀 넣어줘요. 마누라는 지금 딸하고 편의점 하나(사례 C).

일 못해요. 자식들이 생활비 용돈을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래서 뭐 밥

은 뭐 먹고 살죠. 근데 누구 말따나 그래서 이래 살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부담을 줘서 미안해(사례 H).

반면, 자녀의 지원이 어렵거나 부재한 경우,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과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

내 혼자 별짱아요. 요즘에도 좀 일하고, 누가 부르면 한 번 가끔씩 가고. (일은) 대충없어요. 어떤 때는 한 이틀 하고 어떤 때는 하루도 못하고, 이번 달도 카드에서 한 20만 좀 넘게 나왔고, 의료보험 15만원. 우리 둘이서 이게 더 만만치 않아(사례 B).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지. 저도 그렇고 아마 저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이 고민이 많지만 이 고민을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고... 이 나이까지 수고했는데 뭐 그저 마음은 이제 내려놓자 지금은 그 상태에서 지금 하루하루 지내는데(사례 G).

(2) 초국가적 생존 전략: 집, 보험, 연금

참여자들은 한국에 살면서도 중국과 한국 양 쪽에서 살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모두 중국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올 때 집을 남겨 놓았거나 한국에서 번 돈으로 중국에 새 집을 마련하였다. 참여자 B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중국에 집을 넓혀 구입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웃에 살고 있는 동서네와 상의해서 중국에 같은 아파트에 집을 마련했다. 한 번씩 중국에 들어갈 때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 오기 위해서 집을 비워놓았다.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든 중국에 돌아가서 지낼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중국에) 집이 다 있고 그래요. 우리 동서네 8층, 우리네 7층 그렇게 샀어요. 꽤나 커요(사례 B).

중국에 지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엄청 좋더라고(사례 C).

(중국에 아파트는) 원래도 있던 것도 있고 산 거도 있고(사례 F).

중국에 집은 다 있어요. 제가 한국에 못 있게 되면 중국에 돌아가면 제가 있어야 하는데 뭐 아파트는 한 채 보유하고 있고 그러지만 지금 저희 집은 10년 한국 나온 뒤로 지금까지 빈집이에요(사례 G).

중국에 아파트가 있어요. 심양에 그냥 있어요. 지금은 또 뭐 그대로 비워놨어요. 중국을 한 번씩 가면... 중국에 우리 땅도 조금 있고...(사례 H).

건강보험도 양국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중국의 보험료도 계속 납입하고 있고 한국에는 암보험을 비롯한 사보험을 가입해 놓았다. 중국과 한국 어디든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는 이제 중국에서도 의료보험 같은 거랑 있어도 다 내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럼 아들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거기서도 한 20년 지금도 그냥 해마다 내요. 여기 또 의료보험 암보험 다 있죠. 실비보험이랑... 갱신형인데 올라서 지금 한 12만원 넘어 나갈걸요. 1세대 보험(사례 A).

마누라 보험도 아들이 다 책임지고 있고 마누라는 삼성화재고 저는 우체국 하나로 보험이라(사례 C).

이들은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복지를 고려하되, 중국의 가족이나 부동산 자산과 연결된 생애 전략도 함께 구상하는 초국가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남아 있고 싶어하면서도 영주권 신청을 망설여왔던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참여자들은 60세 이후부터 중국 정부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업에 따라 한화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된다. 지금은 중국 통장에 그 돈을 모아두고 있지만 한국에서 벌어서 모아둔 돈이 다 소요되면 중국에서 받은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건 나라에 신세를 아니지겠다. 나는 아이(아니) 되면 내 퇴직금

을 가져오면 먹고 사는데 마음대로 먹고 사는데, 사실 그 퇴직금만 가져와도 짐세를 내고 살 수 있어요(사례 D).

중국에서 연금이 중국 돈으로 위안화로 한 삼천 육백 되고, 이제 그 돈을 생활에 보태 써야 되는 거지(사례 G).

우리 아들하고 셋이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 마누라 그 전에 가정부로 있었거든. 그래서 좀 벌고 했으니까 (그 돈으로 생활하고)... (연금은) 중국에서 통장에서 넣어줘요.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사례 B).

이와 같은 다중 거점 기반의 생애 전략은 단순히 “양국 모두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차원을 넘어, 제도적으로 허용된 경계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체류의 제도화와 그 장벽

중국 동포들의 한국 정착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는 매우 협소하다.

참여자들이 한국에 남아서 여생을 보낸다고 생각할 때 해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주 자격이다. 여섯 명의 참여자가 재외동포 자격(F-4)인데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다 안정된 거주를 위해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며, 영주권 취득은 향후 국적 취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참여자들은 소득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주권 신청조차 불가능하고 그 외 여타 조건들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에 있어 사실상 노령의 중국 동포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요원하다.

내가 이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니까 뭐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연봉이 얼마나 돼야 되고, 내 연봉이 아마도 3천, 내가 야간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한 240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거 안 되잖아요. 그 가격이 안 되니까. 옛날에 그때 내가 이 비자 할 때는 이제 결혼 비자로 그때 (영주권 내려) 할 때는 3천만 원짜리 전셋집이 있었으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은 내가 전세 5,500이라도 그건 안 되고 그게 연봉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좀 까다로워졌어요(사례 A).

지금 이 영주권을 하나 만들자니까 1년에 무슨 이제 수입이 4천만원 이상 이런 다는데 내가 일하게 되면 한 달에 400만 원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계속 일하는데도 기껏해야 200몇만 이렇게 하잖아요. 영주권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무슨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주권을 하자니까 힘들고 사실 이제(사례 D).

사례 E는 90세 노모를 홀로 두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매년 영주 자격에 도전하고 있다. 대출없이 현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살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까다로워지는 영주 자격 신청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벽은 참여자들의 정서적 정착 의지와 제도적 배제 사이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머니가) 올해 한 90 됐는데 내가 청도로 데려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뭐 안 간다고 그래서. 자식들은 결혼하고 (한국)국적 다 올려놨으니까 자식들 사는 데는 괜찮거든. 내가 작년에 일할 적에는 거진다(거의 대부분) 4대 보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소에서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소득이 8천 얼마 나왔는데 원래 그래서 1년에 소득이 얼마면 다 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그런 법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해주지 말자’ 격이라고요. 이거는 우리 동포들한테 영주권 안 주자고 장난질하는 거니까 우리도 방법 없다(참여자 E).

또 한가지 한국 생활에 있어 걱정거리는 높은 주거 비용이다. 사례 C와 E는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비에 대한 걱정은 없었으나, 사례 A와 H는 전세, B, D, F, G는 50~60만원 정도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사례 A는 최근 전세금을 이천만원 올려주게 되면서 중국에 모아둔 연금을 찾아서 보냈다고 했다. 사례 A와 G는 한국에 이렇게 오래 거주할거라 생각했다면 집을 매매

했을 텐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한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거지의 불안정성과 월세 부담은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로 보인다.

한국에 처음에 와서 정착해서리 그때 당시 한 5~6백 벌어질 때 그때 당시 한국에서 만약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하여튼 빌라든 아무거든 한 방 한 칸 두 칸짜리라도 사냈으면 그때 구입했으면... 그때는 2015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집값이 좀 평온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사례 G).

(4) 돌아갈 수 없음과 남아 있을 수 없음 사이

몇몇 참여자들은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엄두에 두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건강 문제, 가족 관계, 경제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한 이유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체계 때문이다.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만성질환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의 의료체계가 질병 관리에 훨씬 좋고 안심이 된다. 가까이 사는 자녀들이 함께 병원을 동행해주고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녀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집 사람은 한국에 남아서 계속 살아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몸에 이런 만성 질병이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머리 아프고 불편하면 근처 병원에서 가게 되면 아주 간단하잖아요(사례 G).

이제는 더 갈라 더 갈 수도 없고 애들이 못 들어가게 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아프다하면 저거가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아프면 들여다 보고 뭐 어떻게 병원에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중국(가는 건) 포기해버린 거야. 지금까지는 포기해서 있어요(사례 H).

사례 B는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였다. B는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을 앞두고 50대 후반에 한국에 나왔고 현재 75세이다. 현재 이혼한 둘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재혼해서 안정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중국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일이 여의치 않는 데다가 최근에는 거의 일이 들어오지 않으니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중국에) 집이 다 있고 그래요. 우리 동서네 8층, 우리 7층 그렇게 샀어요. (떠느 리를) 아직도 못 찾았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혼자 찾아라.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한 7월 8월달 9월달 그 정도 가려고. 한국에서 실제로 살기는 좋은 데... 우리 중국에 가면 맨날 노는 거... 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참여자 B).

반면, 사례 C는 얼마 전 영주 자격(F-5)을 신청했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20년 전 아내와 10대였던 두 자녀와 한국에 나와서 자녀들과 아내는 오래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본인은 재외 동포(F-4) 자격을 고집하였다.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한국에서 영주자격과 국적을 취득했기에 혹시 조카들이라도 중국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환갑을 지나면서 자녀들의 성화에 못이겨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로 했다. 온 집안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이십년을 넘게 살았어도 혈연 중 누군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원할 때를 대비해서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해왔다. C의 중국 국적 유지는 가족 중 누군가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나하면 혹시나 앞으로 영주권으로 있다가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뭐 자식들이고 중국으로 데리고 갈려고 제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에 더 좋으면 내가 데리고 가려고 했지. 형님, 누나들이 다 한국 국적을 따고 나니까 너도 해라 하라. 근데 내가 필요 없어 앞으로 조카들 내가 다 데리고 가니까 한 사람이 한국 국적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쉬우니까 중국에 와서 정착하겠다 하면 내가 있으니까 내 앞으로 다 당기겠다
(참여자 C).

이처럼 이들은 한국에서 정착을 지속하고 있지만 완전히 뿌리내리지도 못했고, 중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그 관계 또한 끊어내지 못했다. 두 세계를 오가는 이주의 시간 속에서, 이들의 노년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5. 결론

본 연구는 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재한 중국 동포들의 노령기 삶을 이주, 정착, 공동체, 제도적 배제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석적 통찰을 보여준다. 첫째,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는 주로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은 중국과 한국 양국에 걸친 가족 및 친족, 친구, 지인 등 중국동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초기 정착지 선택, 일자리 소개, 주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사회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중국 동포들은 일상생활 전반을 중국 동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중국 동포들은 본태 조선에서 중국으로의 이주민으로서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조선과 이어진 삶을 살았고, 다시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중국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언어, 문화, 민족적 정체성에 있어 ‘한민족’이라는 동일성을 지녔으나, 현실적으로는 ‘타자’로 분류되고 배제되는 경험을 한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한국에서는 중국 동포로서 “중국에서도 2등 공민, 한국에서도 2등 국민”이라는 자조적 진술은 이들이 겪는 이중적 주변화(double marginalization), 경계적 존재 상태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셋째, 중국 동포들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 걸친 초국가적 생존 전략(transnational survival strategy)을 실행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수입이나 비공식적 부양에 의존하고, 중국에서는 자가 주택과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두 국가에 걸친 이중 기반을 확보

해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어디에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삶, 유예된 소속감을 지속시켰다. 한국에서의 정착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취득의 제도적 장벽과 높은 주거비, 의료비용 부담은 노년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 넷째, 중국 동포에게 한국은 정착국이 아니고 중국은 떠난 나라가 아니었다. 이들의 삶은 '하나의 국가에 귀속된 시민'이 아닌, 두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유예하며 살아온 이주자의 삶이었다. 민족적 일체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제도적으로는 이들을 '완전한 외국인'으로 구분하는 한국 사회의 경계는 여전히 견고하다. 초국가적 삶은 때로 전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도적 배제에 따른 불가피한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 고령에 접어든 지금, 과거의 선택들이 후회로 남기도 한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했던 선택, 중국에 집을 마련하고 한국에 내 집을 갖지 못한 선택은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한 노령 중국 동포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이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주민들의 경우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공공부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결혼이주민을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노령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체류 외국인 고령자에게는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동포에 대한 제도는 초국가적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을 모두 생활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금, 재산, 보험 등도 역시 이중 구조 위에서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 수립에 있어 단일 국가의 정책 접근이 아닌, 초국가적인 삶의 실재를 반영하여 양 국가에 속한 사회보험제도와 수급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 중국 동포들을 위한 여가 문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흔이 넘도록 일하는 중국 동포 노인들은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적고, 대

부분 동포 커뮤니티 내 폐쇄적 관계망 속에서 여가와 일상을 보낸다. 이는 정체성 고착화,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그들의 문화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고령 이주민을 위한 통계 및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2024년 국내 체류 재외동포 중 60대 이상의 비율 40% 넘어서며 2023년에 비해 2.4% 높아졌다. 재외동포 고령화는 중국동포 고령화를 방증한다. 2024년 전체 재외동포 가운데 중국동포는 70.3%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재한 재외 동포의 고령화 혹은 중국 동포의 고령화를 ‘노쇠해지는 외국인력’의 관점에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정작 대한 민국 국적이 없는 이들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하고 이들의 삶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령 이주민에 대해 거주 자격별, 국적별 상세한 통계와 국내 계속 거주 의사, 연금 수령 현황 등 정밀한 통계 구축과 정책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교신: 한소정(한국이야기아카이브 연구원)(evedaisy@naver.com)

Correspondence: So Jeong Han(Researcher, Korea Narrative Archive)(evedaisy@naver.com)

2025.04.16 접수, 2025.05.04 심사, 2025.05.22 게재확정

참고문헌

- 구본규, 2013,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 비교문화 연구, 19(2), 5-51.
- 김안나 외, 2012,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국제 비교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김유휘, 2018, 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1), 180-208.
- 김윤태, 2017, 중국동포 다중정체성의 형성: 문화대혁명 시기 한민족 정체성의 소실과 복원, 중국연구, 86, 115-140.
- 김윤태, 2021, ‘재한 중국동포’의 정치적 초국가주의 실천과 함의, 중국과 중국학, 44, 25-56.

- 김윤태, 2022, '재한 중국동포'의 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 실천과 함의, 중국과 중국학, 47, 1-30.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 김지혜, 2018, 한국언론의 중국동포(조선족) 담론 분석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신문의 프레임을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2), 37-73.
- 박경숙 외, 2019, 중국동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 박미화 외, 2024, 고령 이주민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월호.
- 서울신문, 2024.10.22, 한국서 노령연금 받는 외국인 절반이 중국인... 101억 받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022500034>.
- 서종근 외, 2023,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43(1), 265-281.
- 양한순 외, 2013,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 오정은 외, 2016,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재외동포재단.
- 이도은·최서리, 2020, 영주(F-5) 자격의 국내법상 지위 검토: 사회복지상 수급권을 중심으로, MRTCI슈브리프, 이민정책연구원.
- 이창원 외, 2021,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에 대한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 이춘호, 2014,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1(3), 143-180.
- 이형노, 2019, 방문취업(H2) 제도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고용실태조사, 인문사회21, 10(5), 1655-1667.
- 최서리 외, 2016,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다문화와 평화, 10(3), 106-126.
- 최서리·이창원, 2021, 한국의 취업이민정책과 인적자본 시민권, 다문화사회연구, 14(3), 279-324.
- 최승현, 2016, 조선족 정체성의 '다름'과 '선택'에 관한 역사적 고찰,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제9회 디아스포라 학술제, 39-54.
- 최승현, 2020, 재한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중국요인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5(4), 27-45.
- 통계청, 2022, 2021년 장애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 2020-2040년.
- 한국경제, 2025.04.03., 중국 동포도 늘어간다... "3D직종 일할 사람 확 줄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391901>.
- 황혜영·천지아, 2016, 재한 중국동포의 민족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3), 403-411.
- Kwon, J. H., 2023, Borderland Dreams: The Transnational Lives of Korean Chinese

- Workers. Duke University Press.
-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2004,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Migration: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 1002-1039.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2nd ed.). Jossey-Bass.
- Schiller, Nina Glick et al.,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1), 1-24.
- Schiller, Nina Glick et al.,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 Wong, Lloyd L., 2008, Transnationalism, active citizenship, and belonging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63(1), 79-100.

The Lives of Elderly Korean Chinese in South Korea as Transnational Migrants

So Jeong Han* · Dong Soon Kim**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lives of elderly Korean-Chinese (Joseonjok) migrants in South Korea to identify effective policy directions for this aging population. Using a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individuals aged 60 and older. The findings show that participants relied on co-ethnic networks during migration and settlement, with daily lives centered in Korean-Chinese communities. In later life, they developed dual retirement strategi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making cross-border decisions to enhance well-being. These patterns reflect transnational survival strategies shaped by fluid identities and sustained mobility. The study calls for more inclusive social security systems, institutionalized leisure programs for elderly migrants, and the development of policy and statistical research that better address the realities of aging in transnational contexts.

Keywords Transnationalism, Transmigrant, Elderly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Preparation for Later Lif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 First-Author, Korea Narrative Archiv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researcher, evedaisy@naver.com

** Co-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blic Healthcare Cent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Researcher, daeressa@skku.edu